

2050 탄소중립 실현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불가피

글로벌에세이

최성주

고려대 특임교수
전 주 폴란드 대사



원전산업 비약 발전 기원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에 이르렀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점차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문 정권의 실책 중 으뜸이 탈원전이었으므로 비정상적 정상화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의 폐기는 당연한 귀결이다. 대표적인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서 원전은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없는 국가발전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에너지가 곧 국력이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바로 국가안보라는 얘기다. 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실현은 문 대통령이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6차 기후변화회의(COP26)에서 전 세계에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경제 규모와 함께 탄소배출 규모도 세계 10위 수준인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탈원전론자들은 원전을 반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만을 선호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토 면적은 협소한데 그중 산악이 70%에 달한다.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입지는 응색하다. 원자력도 원자로 사고 및 원전폐기물 안전 측면에

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원전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설계 시스템도 강화돼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 가동이 즉각 중단되는 등 비상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 흔히 거론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이 아닌 해일 피해였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예상하지 못한 높이의 거대한 해일이 밀려와 원자로 건물을 덮친 것이다.

원전이 전 세계적인 부흥기를 맞고 있다. 1979년에 발생한 TMI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에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한 미국은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해외 수출에 나서고 있다. 당초 원전 감축을 표명한 영국과 프랑스도 입장을 번복했다. 중국은 향후 15년간 최소 150기의 원전을 신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 재가동을 발표했다.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온 독일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가스 공급 문제로 원전 폐쇄 속도 조정을 고민 중이다. 이처럼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원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국가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경우 유럽 지역과는 달리 인접한 국가와 에너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우리가 북한, 중국 및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원자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원전 이용은 필수적이다.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한 대로 폴란드와 체코 등 해외 원전 공동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 우리의 원전 기술과 노하우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망가뜨린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장차 우리 원자력계를 이끌어 갈 젊은 공학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신기술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000년대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내사찰 과정에서 과거 미신고 원자력 연구활동이 드러나 국제적 이슈가 된 적이 있음을 명심해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일이다. R&D 과정에서 밀실주의를 지양하고 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은 방산과 함께 국방 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대표적 '효자 종목'이다. 원전의 해외 진출이 성사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올해 4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에 다뤄져야 할 국가적 현안이다. 원전기술 문제가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소위 '기술주권' 문제에 집착하다가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그림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명분이나 자존심보다 실익을 추구하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주권을 외치다가 원전수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라는 얘기다. 원전 산업계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과거 원전부품 위조인증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제핵비확산체제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민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원자력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社說

후폭풍 키우는 정부의 선부른 한·일외교

'제3자 배상안'에 각계 반발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자금으로 피해자에 배상하고, 일본 기업이 향후 참여하는 '제3자 배상안'이 일본의 책임을 덮어주는 합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배상 책임을 완강히 부인하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배상안의 핵심은 국내 기업이 출연한 기부금을 배상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한국 정부가 최대한 양보했다'는 일본 측 입장처럼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 일본 기업과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던 과거 윤석열 정부의 생각과도 맞지 않다.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적시한 대한민국 대법

원의 판결 취지도 반영하지 못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시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로의 퇴행'을 막겠다며 우리 스스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분열도 우려된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본과의 관계를 넘어 우리나라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과거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는 '뚝어 죽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절규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가해 기업이 피해자 배상에 참여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일제가 저질렀던 위안부 문제부터 독도영유권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푸는 열쇠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선부른 외교는 후폭풍만 불러올 뿐이다.

우주발사체 조립장 유치전 과열 안된다

인인사대천명 자세 필요

고흥군과 순천시, 창원시간 한국형 우주발사체 조립장 유치 경쟁이 뜨겁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말께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설립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그동안 두 차례 쏘아 올린 누리호의 경우 경남 사천에 있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조립장 등에서 조립·제작됐으나 누리호 기술이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감에 따라 새로운 조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과 순천, 고흥 등 3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해 용역을 의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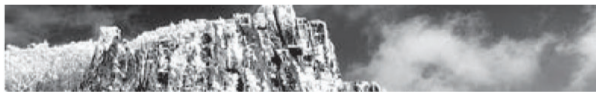
이들 지자체는 향후 1조원이 투입되고 지역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국내 우주발사체 조립장 유치전에 나섰다. 단조립장 유치가 가장 먼저 뛰어난 곳은 우주발사체 발사장이 있는 고흥군이다. 정부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은 고흥군은 2년 전부터 전남도와 함께 단조립장 유치를 위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해온만큼 최적의 입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순천은 나로우주센터와 사천을 잇는 삼각편대로 최적의 항공 우주 배후도시"라고 주장하면서 발사체를 해상으로 고흥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울촌항이 있는 울촌1산단을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가 소재한 장원시는 가포신항에서 발사체를 실어 뱃길로 나로우주센터로 수송한다는 계획이고,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40개 업체 중 6개사가 창원에 있고 재료연구원과 전기연구원 등이 있어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이 유리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데 우주발사체 조립장 유치가 3파전으로 과열상상이어서 우려된다.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전남도에 입장 중립을 요구했다. 이는 전남도 실무 고위 간부가 "정부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한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조립장 후보지로는 최적지"라고 말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겨냥한 대응이다. 최종 입지 결정은 민간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 도내 지자체간 과잉유치경쟁으로 인해 지역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제3자가 웃음짓는 일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한다. 선택의 시기에 역효과가 나타날 일은 삼가고 인인사대천명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타계 10주기인 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리카스에서 시민들이 차베스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된 혁명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카리카스=AP/뉴시스



서석대

봄은 피부에서 시작된다. 소매의 깃을 치는 바람이 더 이상 아프지만은 않을 때, 봄을 느낀다. 파릇한 풀내음이 코끝을 스치면 왠지 모를 경외감으로 마음이 일렁인다. 맵찬 겨울을 다 견뎌내고 싹을 틔워올린 생명력의 위대함 때문이다.

무채색 겨울의 흔적이 충전연색으로 뒤덮일 무렵은 비로소 봄을 만끽해야 할 때다. 겨울의 찬 기운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망울을 터트리는 꽃은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세 번 핀 꽃놀이이다. 동백이 피고나면 산수유, 매화, 목련이 차례로 꽃봉오리를 터트린다. 봄꽃의 대명사인 개나리와 진달래가 연달아 얼굴을 드러내고 나면 벚꽃과 유채꽃, 튜립이 교향곡의 절정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봄의 몽환 속으로 봄맛이 나선 길손들을 이끈다. 흐드러지게 핀 철쭉은 화려한 원색으로 마치 꿈에서 깨우듯 상춘객을 현실세계로 안내하며 봄꽃의 대미를 마무리한다.

봄꽃 피는 차례를 읊겨된 것은 봄꽃의 출현이 유독 반갑

기 때문이다. 사계절의 순서를 '봄-여름-가을-겨울'로 외워왔던 탓일까. 봄꽃을 목격한 뒤에서야 새로운 해가 시작됐음을 인식하곤 한다.

올해 초목들에 유독 눈길이 간다. 길고도 추웠던, 그래서 유독 힘들었던 겨울을 변함없이 버텨낸 까닭이다. 지난했던 팬데믹은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놓았지만, 엄연한 절기의 질서는 무너뜨리지 못했다. 예측불허의 환경에도 어김없이 꽃잎을 터트리는 자체가 무한감동이다.

전남 대표 꽃축제인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축제가 4년만에 열린다. 광양 매화축제는 10일부터 19일까지, 구례 산수유 축제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꽃망울은 산수유가 먼저 터트렸지만 매화가 하루 빨리 봄을 기다렸던 나들이객들을 맞이한다.

절기가 변해 또 봄이 온다한들 황대로 흰 서민들의 등골이 퍼질리 없겠지만, 청아한 하늘아래 만개한 매화꽃, 산수유꽃을 보며 시름을 달래보는 것도 작은 활력소가 될 것 같다. 박상지 정치부 차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www.jnilbo.com m.jnilbo.com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